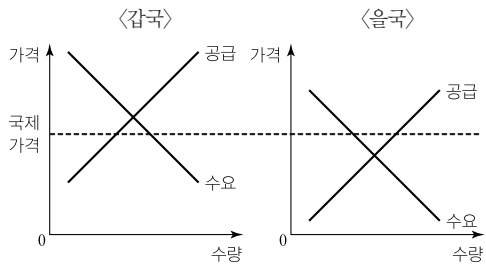


경제

1. ③	2. ④	3. ①	4. ④	5. ④
6. ①	7. ①	8. ④	9. ④	10. ③
11. ⑤	12. ②	13. ⑤	14. ⑤	15. ④
16. ③	17. ③	18. ②	19. ②	20. ②

1. ③ X재 가격 하락이 Y재 수요 증가를 초래하는 것을 통해 보완재 가격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① X재 시장의 변화를 통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X재 시장의 변화가 Y재 시장의 변화에 미친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② 대체재 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 요인이므로 제시된 그림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④ Y재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X재 시장의 변화가 Y재 시장의 변화에 미친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⑤ 가격 인하 전략이 탄력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시된 그림을 통해 설명할 수 없다.

2. 갑국, 을국에서 X재 교역 결과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거래량	증가	감소
거래 가격	하락	상승
소비자 잉여	증가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증가
사회적 잉여	증가	증가

3. ㄱ. A재는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통해 완전 비탄력적 재화임을 알 수 있다. 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A재가 완전 비탄력적, B재가 비탄력적, C재가 단위 탄력적, D재가 탄력적이다. ㄷ. 비탄력적 재화는 가격을 인하할 경우 판매 수입은 감소하고, 단위 탄력적 재화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 ㄹ. A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4. 갑이 제안한 방안은 최저 가격제에 해당한다. ④ 최저 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 거래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① 갑이 제안한 규제 가격 수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X재 시장 가격은 2,000원보다 낮다. ③ 최저 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X재 거래량은 감소한다. ⑤ 현재 거래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거래량을 규제할 경우 현재보다 높은 가격에 적은 수량이 거래된다. 따라서 갑의 방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5. '이 재화'는 공공재이다. ④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작게 나타나는 것은 과다 생산이 문제가 되는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① 공공재의 예로 국방, 치안, 공원, 거리의 가로등 등을 들 수 있다. ②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③ 공공재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가 가능하므로 공짜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⑤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시장에 생산을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6. ① 학교에서 개설된 방과 후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활동이다.  
 ② 을국 정부가 교육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 것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③ 병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자에 해당한다. ④ 정 사는 소비자 활동에 해당한다. ⑤ 무의 사례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7. ① 갑이 딸기 주스를 생산할 경우 암묵적 비용으로 딸기 재판매에 따른 순수입 2억 원이 발생한다. 명시적 비용은 최소한 0보다 클 것이므로 딸기 주스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2억 원보다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을은 식당 개업에 따른 암묵적 비용(회사에서 받는 급여)을 고려하지 않았다. ③ ㉠도 암묵적 비용(딸기 재판매 수입)을 수반한다. ④ ㉠에 따른 명시적 비용의 값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은 비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은 알 수 없다.
8. ④ 갑은 부가 가치세에 대해서 누진세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 맞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현재 누진세로 운영 중이며, 다만 갑은 누진세율에 대한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 수준까지 올리자는 갑의 주장을 통해 현재 A국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국의 법인세 평균 세율은 25% 미만이다. ② 현재 A국의 부가 가치세 세율이 제품 유형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을 통해 비례세임을 알 수 있다. 비례세는 과세 표준과 세액이 비례한다. ③ 부가 가치세를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전환하면 조세 부담의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의 방안이 소비, 투자의 위축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9. ㄴ. X재 가격이 두 배로 오른 경우 갑이 선택할 수 있는 소비 조합은 (X재 2개, Y재 0개), (X재 1개, Y재 2개), (X재 0개, Y재 4개)이다. 이 중 (X재 1개, Y재 2개)를 소비할 경우의 총효용은 16으로 다른 소비 조합에 비해 가장 큰 값을 갖는다. ㄷ. X재 2개, Y재 2개를 동시에 소비할 경우의 총효용은 19이다. 다른 소비 조합을 선택할 경우 총효용은 19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ㄱ. X재를 2개 소비할 때의 총효용은 19, X재를 3개 소비할 때의 총효용은 18이다. ㄷ. 동일한 소비량에 대응되는 X재의 효용이 Y재의 효용보다 작으므로, 개당 평균 효용은 Y재가 X재보다 큼을 알 수 있다.
10. ③ '경제 문제를 기본적으로 정부 계획과 명령을 통해 해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장 경제 체제와 혼합 경제 체제는 '아니오'라는 같은 답으로 묶일 수 있다. ① 자원의 희소성은 경제 체제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 활동 등을 수행한다. ④ '자원 배분 과정에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장 경제 체제와 혼합 경제 체제는 '아니오'라는 같은 답을 할 것이고, 계획 경제 체제는 '예'로 답할 것이다. 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계획 경제 체제만 '아니오'로 답할 것이므로, C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적 유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11. ⑤ 제시문의 '경제 현상'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불리, 채무자는 유리해진다. 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국의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②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③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한다.
12. ㄱ. 환율이 낮을 때 외국 여행의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 ㄷ. 환율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외화에 비해 높아지므로 외화 예금이 불리할 수 있다. ㄴ. 외화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환율이 하락할수록 유리하다. ㄷ. 외국 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외화를 자국 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 자국 화폐의 총액이 작아질 수 있다.
13. ⑤ ㉠의 경우처럼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명목 GDP가 변하지 않으려면 실질 GDP가 감소해야 한다. 반면에 ㉡의 경우처럼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명목 GDP가 변하지 않으려면 실질 GDP가 증가해야 한다.  
 ①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GDP가 감소해도 명목 GDP

- 가 증가할 수 있다. ②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명목 GDP가 증가하려면 실질 GDP가 증가해야 한다. ③ 총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한다. ④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 GDP가 증가해도 ㉠의 경우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14. ⑤ 을국은 갑국, 병국 모두와 교역을 하고, 갑국, 병국은 을국과만 교역을 하므로, 갑국과 병국 수출액의 합은 을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액에 해당한다. 갑국, 병국을 대상으로 한 을국의 순수출액 총합이 0이므로, 을국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같다. 따라서 갑국과 병국의 수출액의 합은 을국의 수출액과 같다.  
 ① 세 국가 사이에서만 무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순수출액의 합은 0이다. 따라서 ㉠에는 +50이 들어간다. ② 을국이 병국과 무역을 하고 있다. ③ 을국의 순수출액은 0이다. ④ 갑국이 병국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15. ㄴ. GDP는 민간 소비+민간 투자+정부 지출+순수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순수출액은 갑국이 0, 을국이 15만 달러이다. ㄷ. 갑국과 을국의 정부 지출은 15만 달러로 일치하지만, GDP는 을국이 갑국의 2배이다. ㄱ. 갑국의 순수출은 0이지만, 민간 및 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지출이 0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ㄷ. 갑국의 민간 투자와 을국의 순수출은 15만 달러로 같지만, 을국의 수출액이 반드시 15만 달러라고 단정할 수 없다.
16. ③ 제시문은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노동자가 기업 구조 조정의 객체로 전락함으로써, 많은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① 세계화 자체를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쉬운 해고가 가능해져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질 수 있다. ④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제시문과 관련이 없다.
17. ③ 경기 침체 시 시중의 국·공채를 매입하면, 매입 대금이 시장에 흘러 들어가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  
 ① 민간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경기 침체로 보기 힘들다. ②, ④ 일반적으로 긴축 재정, 지급준비율 인상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경우의 대책이다. ⑤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는 더욱 상승한다.
18. 100만 원을 저축하였다고 했을 때, 이자율과 이자 소득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갑국   | 을국   |
|-------------|------|------|
| 명목 이자율      | 4%   | 8%   |
| 물가 상승률      | 0%   | 4%   |
| 실질 이자율      | 4%   | 4%   |
| 세전 명목 이자 소득 | 4만 원 | 8만 원 |
| 세후 명목 이자 소득 | 4만 원 | 4만 원 |
| 세후 실질 이자 소득 | 4만 원 | 0원   |
- ② 세후 갑국은 실질적으로 4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
19. ㄱ. X재 최대 소비량이 변화가 없고, Y재 최대 소비량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X재를 특화하여 Y재량 교역한다는 의미이다. ㄷ. X재 1개가 교환되는 Y재는 2개보다 크고 4개보다 작다. 따라서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4개임을 알 수 있다.  
 ㄴ. X재 1개를 소비하기 위해서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Y재를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 ㄷ. 갑국이 X재에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을국은 Y재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20. ㄱ. t<sub>1</sub> 시기 대비 t<sub>2</sub> 시기 취업자 증가율이 실업자 증가율보다 작다. 따라서 실업률은 상승한다. ㄷ. t<sub>2</sub> 시기 대비 t<sub>3</sub> 시기 취업자 증가율이 실업자 증가율보다 클 때 (실업자 수/취업자 수)의 값이 하락한다.  
 ㄴ. 취업자 수 대비 실업자 수의 값은 값이지만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실업자 수는 t<sub>1</sub> 시기보다 t<sub>3</sub> 시기에 많다. ㄷ. t<sub>2</sub> 시기의 취업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t<sub>3</sub> 시기의 실업자는 100명, 취업자는 1,000명이다. 따라서 취업자의 수는 10배이다.